

판단요건 차이 없는데... 항소심만 가면 감형?

법원이 항소심에서 여러 이유로 '선처'하면서 국민 법 감정과 사뭇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무죄 판단은 달라진 게 없는데..."=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달라진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형(刑)인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담하다'는 피고인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은 법관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탈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A씨 과오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무너져 버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살아난 양심을 기초로 지난날의 잘못을 털고 거듭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1000만원을 납부한 점, 외벌이 수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온 점과 '건장

판사 출신·시장·구청장 등 유·무죄 판단 달라진 게 없는데 잇단 선처 피해자 합의 거부에도 공탁 이유 감형도... "국민 법 감정과 달라" 지적

상태가 좋지 않아 정신·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제대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측 주장도 반영했다. 법조계 B변호사는 "객관적 양형조건 변화 없는데 감형을 쉽게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정계도 걸려있어 중복으로 처벌 받는 듯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용서 없이 돈만 쥐도 감형?"=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는데도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한 사례도 눈에 띈다. 상속 재산 문제로 의견을 달리하는 친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 친형 C씨의 경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C씨는 지난 2000년 7월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자신의 부모님 아파트에서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가족 회의를 하다가 막내 동생의 정수리를 향해 6.2kg 상당의 테라코타 조각상을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동생은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까지 용서받지 못했지만 항소심 단계에

서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반영된 합의가 아닌, 공탁 그 자체만을 판단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감형 요인에 차등을 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정·반성한다고 깎아줘?"=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벌금형으로 낮춰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터넷지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무죄 판단은 같지만 1심 재판 이후 편취한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잃을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양형 판단이 달라져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서대석 서구청장도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춰 선고한 바 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에서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고 특수 재할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변호사는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들의 객관적 양형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감형이 되는 경향성을 띄는 건 사실"이라며 "항소심에 들어가면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구속 피고인들의 경우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도 양형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정치적 요인이 판결 요소가 되면 안된다. 추가된 법리 판단이 없는데도 감형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법 감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직선거법 위반 박선준 도의원 1심 선고유예→2심 벌금 80만원

'박치기왕' 김일의 외손자인 박선준 전남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의 선고유예형은 너무 가볍다는 게 항소심 법원 판단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에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초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충 노동초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전학 갔지만 선거공보물에 노동초를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차량 훔쳐 과속운전 고교생 입건

면허도 없이 주차된 차량을 훔쳐타고 수도권까지 과속 운전을 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5시 30분께 동구 산수동 도로변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을 훔쳐타고 경기도 평택까지 운전한 혐의다.

이들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차량내부에 있던 키로 범행을 저질렀고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순찰중이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5살 조카 폭행한 뒤 방치 숨지게 한 고모 긴급체포

장흥에서...다수의 명 자국 남아 내복 차림 복도 방치 등 학대 정황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고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폭행당한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적극 나서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조카 B(5)양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고모 A(41)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 다는 이유로 B양을 때렸고 B양이 14일 낮 구토를

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14일 오후 6시 10분께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다 다른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졌다.

B양의 몸에는 다수의 명 자국이 남아있었고 의사는 뇌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을 듣지 않아 손바닥을 때렸다"면서 B양 사망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B양은 지난해 10월께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간 부모가 언니인 C(11)양과 함께 고모인 A씨 집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했던 C양은 현재 분리조치가 취해졌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겨울, 내복 차림으로 아파트 복도에 장시간 있었던 B양 등을 기억하며 아동학대 정황을 증언하고 있어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붕괴사고 희생자 추모미사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파트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가 15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제공>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